

‘소통’ 내세우며 시작해 ‘불통’이 되어버린 윤정부 1년

나 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

‘도어스테핑’-용두사멸(龍頭死滅)해 버린 국민과의 소통과 불통의 시작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도어스테핑’이었다. 이는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이 제한되는 청와대에서 용산의 국방부청사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국민과 언론은 생소하지만, 좀 더 가깝게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고 여러 우려 속에서도 이를 지속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긍정적 평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직접 소통의 장에서 나온 대통령발언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정부가 내세운 언론자유, 국민소통의 상징인 ‘도어스테핑’은 시작 6개월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고, 윤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와 같은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창했던 용머리와 같던 화려한 구호는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고, 그 속에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을 고민케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비속어논란’이후 국가최고권력을 기록, 감시하는 영상보도의 위기

지난 9월 22일 뉴욕UN총회 기간, 한미정상회담의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140여개 국내언론에 보도되고 수많은 국내외 논란이 일어난 이후, 국민에게 선출된 국가최고권력인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 전달, 감시하는 영상취재활동과 영상보도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대통령비속어발언을 1보로 전한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전용기 탑승배제’사건은 대통령을 취재, 보도하는 출입기자들과 언론사들의 활동을 스스로 검열하고, 위축케 만드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비속어발언을 취재한 영상기자는 이 취재와 관련해 수많은 고발건의 피고발인으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영상기자들은 이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앞으로 있을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비속어발언’의 취재 당시 대통령실의 해당영상 비보도요청이 출입영상기자단에 의해 거부당하고, 이것이 보도되면서 커다란 국내외 논란을 가져왔다. 이후, 출입영상기자들의 공식적 취재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현장기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많은 주요 일정들에 대한 출입영상기자단의 취재가 제한되고, 많은 대통령일정과 발언들이 전속촬영팀만이 배석한 채 촬영되고 편집되어 공개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국가공식기념행사와 같이 사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는 행사를 제외한 대통령 행사나 주재회의에 출입기자단이 취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대통령 녹취를 위한 오디오라인을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음 녹취를 제한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안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내외 대통령일정 중 대통령실 전속영상팀이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출입기자단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국민적 관심사가 큰 영상보도는 실질적으로 전속영상팀의 영상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출입기자가 맞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적 이미지소통, 여론의 극단화 심화시켜

대중은 영상보도는 '카메라라는 기계적 도구를 통해 생산된 이미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믿음과 '뉴스를 취재, 보도하는 영상기자와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 해 영상보도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이 담고 있는 사실을 수용자가 자신의 시각과 생각, 경험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유에 의해 영상보도의 영향력은 커지고 발전해왔다. 이 신뢰자산과 수용, 해석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만들고, 그 의견들 중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견이 사회적 여론과 상식을 만드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발언을 취재, 보도하는 영상기자와 언론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극도로 제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만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시키려는 것은 결국, 영상보도와 언론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자산을 소멸시키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가로막아 여론의 극단화와 그에 따른 우리사회 민주주의 체계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을 담고 있다는 영상보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좀 더 자신의 가치와 생각에 가까운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팩트 체크와 저널리즘적 책임이 결여된 주장과 의견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여론의 건강성을 해치고, 극단화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

정권의 일방적 소통 극복하고 사회민주화를 발전시켜온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 되 돌아보아야

한국의 역대 정권들에서 긍정이미지와 메시지를 만들어 국민들의 여론을 친정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일방적 메시지와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과 여론이 공존하는 사회를 향해 움직여온 능동적 주체이어 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현 정부와 언론인, 언론사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표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권력으로부터 정의되고, 그 정의에 의해 국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제한된 자유가 절대 아닐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그런 여러 생각과 견해들이 존중되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그 차이를 좁혀, 사회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자유'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자유'라는 국정철학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을 취재, 보도하는 언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취재 보도의 자유, 그들이 소속된 언론사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위축당하지 않는 '언론자유'의 시스템이 온전히 보장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언론인과 언론사 스스로 언론자유 실현자, 행동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노력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 또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배 언론인들의 저항과 극복의 노력을 통해 쟁취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기 때문이다.